



산재처리 지연 근본대책 촉구 농성투쟁 100일 노동부·근로복지공단은 원인과 현실을 인정하고도 왜 해결을 미루나?

금속노조가 산재처리 지연 해결 근본대책 수립을 촉구하며 울산시 근로복지공단 본부와 세종시 노동부 앞에서 농성투쟁을 시작한 지 100일이 넘었다. 노동부와 공단은 산재처리 지연의 원인을 파악하고 있으나, 인력 부족을 내세워 문제해결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금속노조는 7월 15일 농성 100일을 맞아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노조는 “누구도 일하러 나가 다치고 싶은 사람은 없다. 그러나 한국의 노동 현장은 직종과 업종, 심지어 장소까지 가릴 것 없이 언제 어디서나 산업재해가 터지고 있다. 2020년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가 14만 명이다” 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산재를 입은 노동자는 피해자이면서도 해고의 불안과 생계의 위협, 질병의 고통을 모두 떠안고 있다. 산재를 확인하고 관련 조치를 처리하는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이다” 라면서, “근로기준법은 업무상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의 해고를 금지하지만, 처리 기간이 이를 훌쩍 넘어 보통 4-6개월이 걸리고 심하면 2, 3년이 걸린다” 라고 개탄했다.

노조는 “근로복지공단과 감독 책임이 있는 노동부가 이런 현실을 인정하며 처리 기간을 줄이겠다고 공언까지 했지만, 아직 어떻게 해보겠다는 답변은 고사하고 제대로 논의해보자는 이야기조차 없는 상황이

다” 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노동부와 공단을 향해 “산재신청 노동자 14만 명이라는 숫자를 획기적으로 줄일 각오와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겠다는 시늉이라도 해라” 라며 산재처리 기간을 줄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노조는 “산재를 일으킨 기업이 존재하고, 이를 인정하는 데 힘을 쏟지 않는 공단과 이 모두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는 노동부가 존재하는 한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을 위한 금속노조의 투쟁은 농성 투쟁 첫날과 다름없을 것” 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산연지회 투쟁 1년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산연지회가 일본 산켄전기 자회사 한국산연의 일방 위장폐업에 맞서 투쟁한 지 1년이 지났다. 지회는 7월 13일 “우리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라며 투쟁의 결의를 높였다.

노조 경남지부 한국산연지회는 13일 오전 한국산연 앞에서 ‘한국산연 위장폐업 철회 투쟁 1년 기자회견’

을 열고 ▲한국산연 공장 정상화 ▲산켄전기 공권력 요청으로 연행, 구속된 일본 시민 석방 ▲외투기업 규제법안 제정 등을 촉구했다. 지회는 코로나19 국경봉쇄가 풀리는 날 일본 원정 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오해진 한국산연지회장은 “산켄전기는 100% 투자한 한국산연을 해산·청산했는데 지난해 한국에서 2,2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라며 “도대체 어디서 이러한 매출을

올리는 것이며, 이러한 매출을 올리는 회사가 노동자 열여섯 명의 고용을 책임지지 못한다는 경영은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다” 라고 비판했다.

김일식 경남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외국투자기업 규제법안이 없기 때문에 한국산연과 외투기업 노동자들이 투쟁할 수밖에 없다” 라며 “외투자본 규제법안을 만들기 위해 지부도 최선을 다해 투쟁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노조-시민사회 산업전환 공동대책기구 만들자”

기후위기+기술변화 대응 금속노조·시민사회 정책좌담회 ... 논의 이어 가기로

금속노조와 시민사회단체가 만나 ‘노동자도 지구도 행복한 정의로운 산업전환’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노조는 기후위기와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다 루는 공동대책기구를 제안했다.

금속노조는 7월 14일 오후 노조 회의실에서 ‘기후위기+기술변화 대 응 금속노조·시민사회 정책좌담 회’를 열었다. 노조는 15개 단체에 서 온 20명의 참석자와 함께 노조가 추진하는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두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인사말 에서 기후위기와 기술변화에 따른 산업전환 문제에 대응하는 노동운동 과 시민운동의 공동대책기구를 제안 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금속노조 는 산별노조로서 사회의제를 놓고 조직 행동을 해보자는 고민과 욕심

이 있다”라며 이날 좌담회가 노조 의 고민을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나 누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김호규 위원장은 “오늘 좌담회는 일회성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시 민사회운동, 환경운동과 금속노조· 조합원이 기후위기와 정의로운 산업 전환을 위한 공동대책기구를 만드는 논의로 발전하기 바란다”라고 밝혔 다.

이성희 노조 정책국장이 노동조합 이 이해하는 기후위기 문제와 제조 업 위주로 분석한 산업전환 현황을, 김상민 정책실장이 정의로운 산업전 환의 개념과 금속노조가 추진하는 ▲노·사 산업전환협약 ▲공동결정 법 내용과 입법운동 ▲산별노조 활 동의 중요성과 장애물에 관해 발제 했다.

예정한 시간을 훌쩍 넘기면서 열 띤 토론을 벌인 참가자들은 ‘정의 로운 산업전환’을 위한 금속노조의 시도를 한목소리로 높이 평가했다. 토론 시간에 기후위기 대응에 따른 노동조합의 이해관계 충돌과 조합원 의 공감대를 확인하는 질문과 노동 조합에 대한 제안, 산업전환에 대한 의견 제시 등이 이어졌다.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이사장인 송경용 신부는 참가한 시민사회를 대표해 “노동조합과 시민사회가 많 은 고민과 노력을 해도 서로 접점이 부족했는데, 금속노조가 좌담회를

마련해 토론의 물꼬를 텃다”라며 이해를 바탕으로 대화 폭을 넓혀 가 자고 주문했다.

이태호 시민사회연대회의 운영위 원장은 “오늘 논의를 계기로 보수 와 진보를 가리지 말고 산업전환의 이해당사자가 모두 모여 긴 호흡으 로 3년 정도 진행하는 숙의민주주의 대화프로그램을 진행하자”라고 제 안했다.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 구기획위원은 “정의로운 산업전환 이 정규직 제조업 노동자 일자리 보 전이라는 의구심이 있을 수 있다”라 며 “그러나 이러한 의구심은 맞 부딪혀 봐야 해소할 수 있다. 서로 두려움 없이 공동의 과제로 삼았으 면 좋겠다”라고 평가했다.

김현우 연구기획위원은 금속노조 가 할 수 있는 실천으로 ‘기후과 업’을 제시했다. 김현우 위원은 “올해 장마가 짧고 불볕더위가 온 다는 예측이 있다”라며 “불볕더위 가 닥쳤을 때 산업전기 사용을 줄이 는 등 지구를 위한 기후과업을 할 수 있다. 금속노조가 적극적으로 검 토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했다.

좌담회 참가자들은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금속노조는 진행 중인 공동결정법 제정과 산별노조할 권리 노조법 개정 입법청원운동에 시민사 회가 관심을 두고 동참해 달라고 당 부했다.

공동결정법

국민입법 청원

바로가기

